

미국 대선 이후 정책변화와 국내 영향 점검

-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. 동시에 공화당이 상·하원 다수당 등극.
- 감세와 규제 철폐 기조로 자국 내 경제 부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강력한 재정지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보호무역주의 천명으로 세계 경제 성장에 동반 부진을 초래할 우려가 확산됨.
- 대선 기간 중 불거진 공화당 주류 세력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폭적 의회 협조가 불투명하므로 극단적 정책 추진 우려는 다소 완화될 전망.
- 그럼에도 환율조작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어 대미 무역 흑자폭 감소 및 기존 무역협정 재협상, 반덤핑,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강화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 증가 등 대미 통상환경이 악화될 전망.
- 금융시장 단기 변동성 심화로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은 어려워 보이며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여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.

-
- 작성자: 송완영 연구위원 (051-663-8157 / 7608@hf.go.kr)
 -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-

1 조사 배경

□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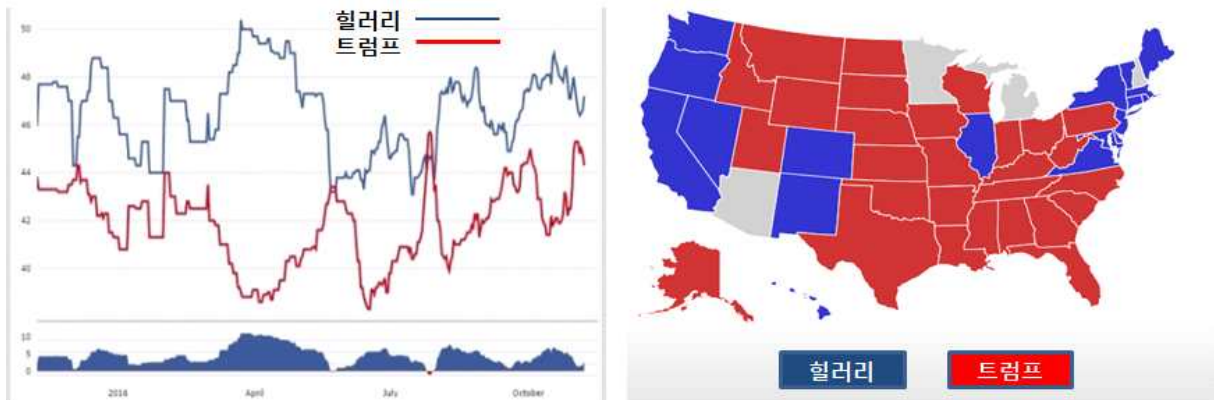
- 11월 8일(현지시간) 도널드 트럼프(이하 트럼프)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
- 공화당은 8년 만에 정권 탈환 및 상·하원 다수당을 획득하여 행정부와 의회 권력 장악에 성공.
- 당선 확정 직후 아시아 증시 폭락 및 채권 금리 하락 등,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향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 표출.
- ‘감세’와 ‘규제 철폐’로 대변되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되며 보호무역주의 회귀 성향에 따른 대미 통상압력 강화와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등 불리한 대외환경 노출 전망.
- 다만, 공화당 주류 세력과의 갈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극단적 정책 추진은 의회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.
- 이에 대선 기간 동안 제시되었던 당선자의 공약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국내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.

2 미국 대선 결과

□ 미국 대선 결과

- 11월 8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.
- 당초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밀리는 양상이었으나 경합주(플로리다, 오하이오, 펜실베이니아)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당선.

[그림 1] 선거 직전 지지율과 대선 결과 지형도



※ 자료 : Real Clear Politics

- 공화당은 8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고 동시에 상원·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하여 행정부 및 의회 권력 장악

□ 금융시장 반응

- 트럼프 당선이 가시화되면서 코스피는 2.25%, 코스닥은 3.92% 하락했고, 국고채 10년물은 10bp 하락. 상대적 안전자산인 엔화로 수요가 몰리며 엔환율은 전영업일 대비 3.77% 하락 마감
- 당분간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며 글로벌 안전자산 위주 포트폴리오 재편성이 예상됨.

3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이행 전망

□ 자국 내 정책 방향

- 경제정책의 기본 모토는 “감세”와 “규제 철폐”임.
- 소득세 최고세율 39.6%→25.6% 인하, 상속세 폐지¹⁾, 법인세 35%→최대 15% 인하 및 해외 발생 기업수입은 일률적으로 10% 세율 부과 제시.
- 5,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공약 제시. 필요자본 확충안으로 채권 발행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따른 추가 자금 확보 등을 주장하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불투명함.
- 기존 오바마케어²⁾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료 외의 실비를 보건 저축계좌(HAS, Health Savings Accounts)를 통해 지불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고 세금 면제.

□ 금융 규제와 통화 정책

- 과도한 금융규제로 인하여 지역 소규모 은행까지 피해를 본다며 도드-프랭크³⁾ 금융개혁법 폐지를 공약하였고, 지난 7월 공화당 강령에서 채택된 글래스-스티걸법⁴⁾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. 이는 법안 자체 문제가 아니라 힐러리 측이 도드-프랭크법 유지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으로 풀이됨.
-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을 인플레이션 유발 및 경제성장 저해 요소로 비난해 왔으나 트럼프는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음.

1) “평생 세금을 낸 근로자들에게 죽어서도 세금을 내게 할 수 없다”. 힐러리 후보는 이 정책이 트럼프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 상속세 폐지에 반대.

2) Affordable Care Act :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 보험 가입 의무화가 주 내용.

3) Dodd-Frank Act : 2008년 금융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금융개혁법안.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한 볼커룰(Volcker Rule) 등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가 골자이다.

4) Glass-Steagall Act : 금융기관이 상업은행(예금, 대출) 영업과 투자은행업을 겸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으로 대공황 이후 은행의 방만한 영업규제를 목적으로 1933년 제정되었으나 1999년 클린턴 정부에 의해 폐지.

□ 대외 정책 : 보호무역주의 및 대북정책

- 힐러리 후보와 동일하게 환율 조작국⁵⁾에 대한 강경대처 및 현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 조항에 반대하며 FTA 등 기존 협정의 재협상 시사.
- 미국은 행정부에 무역규제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반덤핑, 상계관세 부과⁶⁾ 등의 무역규제 조치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 존재. 트럼프는 이미 중국에 대해 45%의 징벌적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천명한 바 있음.
- 외교정책은 “동맹 상호주의 원칙” 하에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을 포함한 동맹국의 비용 부담을 요구. 강경한 대북정책을 기본으로 하나, 중국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며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언급.

□ 향후 정책추진 이슈

- 비록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얻었으나 대선 기간 동안 불거진 트럼프와 공화당 주류세력과의 갈등⁷⁾을 신속히 풀지 못한다면 의회 협조를 낙관하기 어려움.
- 통상정책의 경우, 트럼프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 온 공화당 주류세력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. 이에 공화당 주도로 이루어진 NAFTA, FTA 등의 협정 재협상이 의회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.
-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, 주한미군 철수 등의 발언은 경선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, 계산된 정치적 발언⁸⁾이라는 해석 하에 향후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.

5)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, 경상수지 흑자,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시 대상으로 지정. 지난 4월 한국, 중국, 일본, 독일, 대만을 지목했음.

6)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, 수입국이 그 상품에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.

7) 프린스턴 대학 줄리언 펠리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시 공화당은 ‘트럼프 적극 지지층’, ‘극우 성향’, 라이언 하원의장 중심의 ‘온건파’로 나뉘어 내전 상태나 다름없을 것이라 전망. (11.08 한겨레신문 기사 발췌)

8) 김창준 전 공화당 3선 하원의원 인터뷰 내용(2016.07.19., 파이낸셜 뉴스 기사 참조). 그는 또한 미국 보호 무역 회귀 정책의 주타깃이 중국임을 강조함.

4 국내 영향 전망 및 시사점

□ 보호무역 강화 : 대미 통상환경 악화

-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 정책과 대치되는 면이 있으나, 미국 내 소득 불평등 불만 증가에 따른 반세계화와 자유무역 반대 기류에 편승한 조치가 가시화 될 것임.
- 한국은 이미 지난 4월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명된 바 있으며, 이에 환율조작에 대한 의혹과 압박이 지속되어 대미 무역 흑자 폭 감소 예상.
- TPP 재협상, FTA 협정 개정(amendment) 이슈 및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,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강화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 증가 등 대미 통상환경이 악화될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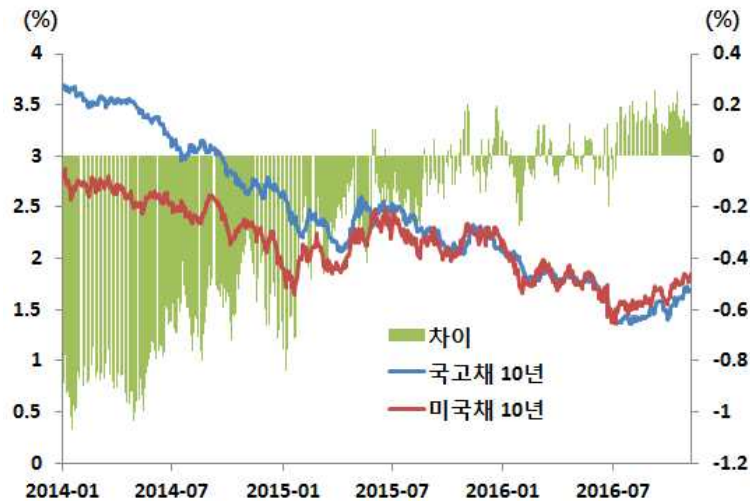
□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

-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우려로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가 불가피해 보이며 미국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짐. 이에 따라 미국 경기 회복세에 맞추어 점진적 금리 인상을 준비하려던 FOMC의 통화정책 자체가 불확실해짐⁹⁾.
-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현상은 미국 수출 자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현 상황에서 당분간 금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어려울 전망.
- 반면,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에 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이 예정되어 있는 바, 만약 강력한 감세와 재정지출 정책을 확대한다면 단기적으로 금리인상 속도 및 폭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함.
- 한편, 2015년 하반기부터 한국과 미국의 10년 이상 장기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올해 중반부터 미국 경기회복

9) 엘런 연준의장은 트럼프 당선 시 향후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시사.

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음. 미국 금리 급등 시 전체 구간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, 이에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 유출이 가속화 될 것이 우려됨.

[그림 2] 한국과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추이



- 따라서, 금리역전 지속 및 미국의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 등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가계부채 이슈 등과 맞물려 향후 안정적 통화정책 추구에 난항이 예상됨.
- 또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에게 국내 금리 동반 상승의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으며, 이에 단기간에 대출수요가 급등할 가능성이 존재. 공사는 중장기 전략 수립에 있어 대세 금리상승 시기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비책 마련과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.